

[장수원 사회]

2015년 서울시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출제영역] 정부형태 자료 분석 문제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면 여당 의석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제출 발의안 발의수와 국회 제출 발의안 발의수는 각각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은 20대에 줄어 들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회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ㄱ. (X) 20대 국회의 경우 여당 의석률이 상승(44%→46%)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은 하락(42%→39%)했습니다.

항목 시기(국회)	정부 제출 발의안		국회 제출 발의안		여당 의석률(%)
	발의수	가결률(%)	발의수	가결률(%)	
19대	13,985	42	9,542	46	44
20대	16,542	39(↓)	10,867	51	46(↑)

ㄴ. (O) 20대 국회의 경우 비록 국회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이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보다 높지만 국회 제출 발의안의 절대적인 발의수가 정부 제출 발의안의 발의수보다 적어서 국회 제출 발의안 가결수(10,867×0.51≒5,524)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 가결수(16,542×0.39≒6,451)가 많습니다.

ㄷ. (X) (X) 이 선택지가 해석이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니까 마치 옳은 선택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선택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제이지만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해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의 가능 유무에 따라 의원내각제의 정부 형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정부 형태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행정부의 구성이 의회의 다수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의원 내각제이고 의회의 구성과 무관하게 국민들에 의해 따로 선출되면 대통령제입니다. 제시된 자료에서 19대, 20대 여당 의석률을 살펴 보면 50%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당은 행정부 수반이 소속한 집권당을 의미하는데, ‘의원내각제’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여당이 되어 행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석률이 50%미만임에도 여당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갑국’의 정부형태가 ‘대통령제’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의원내각제’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경우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통하여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이러한 두 정당이 공동여당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두 정당(=공동여당)의 의석률의 합은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ㄹ. (O) 여당 의석률이 과반을 넘어선 경우가 여대야소로 21대 국회에 해당합니다. 여당 의석률이 과반을 넘지 못한 경우가 여소야대로 19, 20대 국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1대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이 58%이고 19, 20대의 경우 각각 42%, 39%입니다. 이를 통해 여대 야소인 경우가 여소야대인 경우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에 대한 가결률이 더 높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2. [정답] ①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핵심요약정리] 대표 선출 방식

선출 대상	투표 행사	구분	선출 방식	임기	제한
대통령	1인 1표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5년	단임
국회의원	1인 2표	지역구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4년	
		비례대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광역 자치 단체장	1인 1표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4년	3기
기초 자치	1인 1표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4년	3기

단체장					
광역 의회	1인 2표	지역구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4년	
		비례대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기회 의회	1인 2표	지역구	중선거구제+소수 대표제	4년	
		비례대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시·도 교육감	1인 1표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	4년	3기

① (O) 서초구는 ‘특별시의 구’로 기초 지방 자치 단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초구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기초 지방 의회의 선거로 선거구제도로는 중선거구제 대표 선출 방식으로는 소수 대표제 방식이 맞습니다.

[관련조문] 주민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관련조문] 공직 선거법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② (X)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 비례대표, 광역 의회와 기초 의회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기초 지방 의회의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선출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 국회의원 지역구, 광역 자치단체장, 기초 자치단체장, 광역 지방의회 선거는 모두 소선거구제와 다수 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③ (X) 서울시는 특별시로 광역 자치 단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지방의회 선거는 광역 의회 선거로 1인 2표제이며 지역구는 소선거구제이고 비례 대표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④ (X)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단임제입니다.

[관련조문] 헌법 제70조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3. [정답] ④

[출제영역] 국제연합의 주요기구(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취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5개 상임 이사국과 임기 2년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연합(UN)의 주된 사법기관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상설국제사법재판소를 계승한 것으로 국제연합의 주사법기관입니다. 국적이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서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개정은 1946년 4월과 5월 헤이그에서 열렸습니다. 국가 간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므로 국가만이 법원에 제소되는 사안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소의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영어입니다. 심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판결은 다수결로 하며 공개법정에서 낭독합니다. 가부동수의 경우 재판소장이 결정투표권을 갖습니다.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 1991년 9월 17일에 국제연합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① (O)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의사 결정은 절차사항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9개 이상의 이사국이 찬성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5개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만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관련 안건이 부결됩니다. 이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국가 간의 힘의 우위’를 인정하는 현실주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조문] 유엔헌장 제27조

1.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3. 그 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② (O) 해설참조

[관련조문] 유엔헌장 제2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유엔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및 미합중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총회는 먼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기구의 기타 목적에 대한 유엔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 외 10개의 유네스코회원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③ (O) 일방 당사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타방 당사국은 안보리에 제소할 수 있으며 안보리는 판결의 이행 권고 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제한적(현실주의적 입장)이긴 하지만 적절한 조치(이상주의적 입장)를 하는 방식으로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조문] 유엔헌장 제33조

1. 어떠한 분쟁도 그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는 우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약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제37조

1. 제33조에 규정된 성격의 분쟁당사자는, 동조에 규정된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실제로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36조에 의하여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해결조건을 권고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④ (X) ‘국제 연합(UN)’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으로 ICJ규정의 당사국이 되어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간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므로 국가만이 법원에 제소되는 사안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유엔헌장 제93조

1. 모든 유엔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

2. 유엔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각 경우에 결정하는 조건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관련조문]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4조

1. 국가만이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35조

1. 재판소는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에 대하여 개방된다.

2. 재판소를 다른 국가에 대하여 개방하기 위한 조건은 현행 제 조약의 특별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다.

제69조

재판소규정의 개정은 국제연합헌장이 그 헌장의 개정에 관하여 규정한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이면서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참가에 관하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른다.

4. [정답] ②

[출제영역]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책임능력, 특수불법행위

ㄱ. (O) 민사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피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위법성, 책임성, 가해자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업자의 책임,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의 책임, 국가의 영조물 설치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음). 특징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부분이 형사상 범죄를 다룰 때와 차이가 납니다. 형사상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ㄴ. (O) 민사적 책임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것임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가해자에게 이러한 책임능력이 없으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적 책임능력은 사람의 분별력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확일적·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만 12세 정도를 그 경계점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책임 능력은 “**불법행위에 관한 의사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불법행위에 대한 의미 내용을 이해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근대 사법의 한 표현이 “**책임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 형사상 책임능력은 자신이 한 행위가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발생시킬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형사적 책임능력은 비난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형법은 이것을 만 14세로 확일적으로 규정하여 14세 미만은 책임을 조각시켜 범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상 위법성과 형사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모두 개별 행위의 법질서의 위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과 같습니다.

※ 책임능력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차이

	민사상 책임능력	형사상 책임능력
의미	자신이 한 행위가 어떠한 민사상 책임을 발생시킬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 → 불법행위에 대한 의사능력을 책임능력이라고 봄	자신이 한 행위가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발생시킬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
판단	확일적·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다만, 판례는 만 12세 정도를 그 경계점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	만 14세로 확일적으로 규정
책임무능력자	대략 만 12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ㄷ. (O) 민법에서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이외의 손해(대표적으로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은 금전 배상이 원칙**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ㄹ. (X) 공동 불법행위 책임, 고용관계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은 특수 불법행위책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의 경우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 즉,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특수불법행위**입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답] ③

[출제영역] 주택임대차보호법

① (O)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정합니다. 다만,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그러지 못합니다.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대항력(對抗力)은 임차인이 제3자(대표적으로 바뀐 집주인)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집 주인이 바뀐 경우 기존의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바뀐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관련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O)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하고는 선순위 권리자인 저당권자가 우선하므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③ (X) 선택지가 낚이기 쉽게 되어있는데 틀린 선택지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되지만 선순위 권리자인 저당권자에 비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④ (O)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액수가 소액이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선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임차보증금은 일부에 대해 우선 변제 받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참고로 2014년 이후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9,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우선 변제금은 3,200만 원입니다.

[관련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의미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요건	대항력+확정일자	대항력
액수	보증금 전체	보증금 중 일부만
등기	필요치 않음	필요치 않음

6. [정답] ④

[출제영역]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가)는 집행유예로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고 (나)는 선고유예로 경미한 형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을 무탈하게 경과하면 면소(피고사건이 실제적인 소송조건을 결여하고 있어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는 판결)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① (O) 해설참조
② (O) 범죄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선고 유예는 경미한 형의 선고를 할 경우로 전과가 없었거나 있더라도 경미한 전과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함께 기억해 둘 것은 집행유예와 선고 유예 판결 모두에 대해서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와 상고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③ (O) 해설참조
④ (X)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정답을 이렇게 요구하는 건 좀 치사하네요.-.

7. [정답] ②

[출제영역]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 ㉡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자연현상이고 ㉢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① (O) 자연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지 않아 불가치적(인간이나 그 삶이 지니는 중요성이나 의의 따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입니다.
② (X) 자연현상은 불가치적이므로 인간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존재 법칙(“있다 혹은 없다”의 문제)의 지배를 받습니다. 한편,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으로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므로 당위법칙(“마땅히 이러해야 한다 혹은 저러해야 한다”의 문제)의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남은 기간 생각하는 당위법칙은 국가직, 서울시에 대한 시험은 잊으시고 지방직(교행직) 시험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③ (O) 사회·문화 현상은 확실하지 않아서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일정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은 개연성을 띠니다. 한편 자연현상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반드시 일정한 현상이

나타나는 필연성, 확실성을 띠니다.

④ (O) 자연 현상에 의해 사회·문화 현상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극심한 가뭄(제발 비야 와라!!! 왜 갑자기 신라말 진성여왕 때가 오버랩되죠-.-. 물론 당시는 홍수피해가 극심했다고 하는데)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8. [정답] ①

[출제영역] 일탈행동의 원인(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

(가)는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지배 규범의 붕괴되고 이론인한 사회 혼란으로 일탈행동이 발생한다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나)는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없을 때 일탈행동이 발생한다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① (O) 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일탈을 무규범 상태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일시적이며 예외적인 현상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이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관의 확립(뒤르켐), 사회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의 제공(머튼)을 통해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봅니다. 즉 사회 문제는 정상이 아니며 균형을 회복하면 다시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② (X) 지배집단이 정해 놓은 규범에 상충하는 행위가 일탈 행동이 된다는 입장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기간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이런 조정을 거치지 않고 파업을 한 행위에 대해서 사측이나 언론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는 행위와 같은 경우입니다.

③ (X) 일탈 행위자와의 접촉을 통해 사회화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은 차별적 교재이론입니다.

④ (X) 해설참조

9. [정답] ③

[출제영역] 사회·문화 제시문 분석형 문제

① (X) 광고 홍보학과는 지우의 준거집단이었지만 내집단은 아닙니다. 내집단이 되려면 소속이 되고 소속감을 가지는 경우여야 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진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② (X) 의과대학은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선택적 결합의지에 따른 집단이므로 이익사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접촉방식은 형식적, 수단적 관계가 주로 이루어지는 2차 집단입니다.

③ (O) 광고 홍보학과는 준거집단이면서 외집단이고, 광고 홍보 동아리는 준거집단이면서 내집단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둘 다 지우의 준거집단입니다. 준거집단은 한 개인이 사고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는 집단으로 제시된 사례와 같이 자신이 속한 집단이 준거집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이 준거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속 집단이 준거 집단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만족감이 높아지며, 자신감과 적극성을 갖고 집단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소속 집단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며, 소속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④ (X) 광고 홍보 회사는 결합의지에 따른 구분에 의하면 구성원의 의지나 선택에 의해 의도적, 후천적, 인위적으로 형성된 이익사회입니다. 본질적, 선천적,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된 집단은 공동사회입니다.

10. [정답] ②

[출제영역] 사회·문화 자료 분석 문제(비율과 변화율)

① (X) 여성의 정규직의 평균 임금 상승률이 상승한다고 했으므로 경우의 수는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의 경우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 상승률이 비정규직 평균

임금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의 비중은 작아집니다.

○ 두 번째의 경우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 상승률과 비정규직 평균 임금 상승률이 동일한 경우 →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의 비중은 동일합니다.

○ 세 번째의 경우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 상승률에 비해 비정규직 평균 임금 상승률이 더 클 경우 →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의 비중은 커집니다.

○ 네 번째의 경우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 상승하는데 비정규직 평균 임금 상승은 변화가 없거나 하락하는 경우 →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의 비중은 작아집니다.

여성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013년의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 정규직의 임금 상승률이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률보다 크거나 비정규직 임금은 동일하거나 하락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2013년이 2012년에 비해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차이가 큼니다. 앞선 설명을 숫자로 대입해보면 표와 같습니다. 2012년의 여성 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가정하고 201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105가 된 경우를 가정합니다.

구분	2012년	2013년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	100	105
여성 비정규직 평균 임금 비중	80%	75%
여성 비정규직 평균 임금	80	≒78.75 (=105×0.75)

② (O) ①번의 설명을 토대로 남성의 경우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남성 정규직 평균 임금에서 남성 정규직 평균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를 통해 남성 정규직의 평균 임금 상승률에 비해 남성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숫자로 대입해보면 표와 같습니다. 2012년의 남성 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가정하고 2013년 남성 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105가 된 경우를 가정합니다.

구분	2012년	2013년
남성 정규직 평균 임금	100	105
남성 비정규직 평균 임금 비중	75%	80%
남성 비정규직 평균 임금	75	≒79 (=105×0.8)

이 경우 남성 정규직 평균 임금 상승률은 5%(=105-100/100×100)이고 남성 정규직 평균 임금 상승률은 5.3%(=79-75/100×100)입니다.

③ (X) ①번의 설명을 토대로 하면 여성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상승했지만 여성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경우의 수가 3가지입니다. 여성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상승했지만 여성 정규직의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경우, 동일한 경우, 하락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경우의 수가 3가지이므로 2013년 여성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2012년에 비해 하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명을 숫자로 대입해보면 표와 같습니다. 2012년의 여성 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가정하고 201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200이 된 경우를 가정합니다.

구분	2012년	2013년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	100	200
여성 비정규직 평균 임금 비중	80%	75%
여성 비정규직 평균 임금	80	≒150 (=200×0.75)

이 경우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 상승률은 100%(=200-100/100×100)이고 여성 정규직 평균 임금 상승률은 87.5%(=150-80/100×100)입니다.

④ (X) 제시된 자료는 성별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 비중에 관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만을 가지고는 남성과 여성의 절대적인 평균 임금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②, ③번의 숫자를 대입한 해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이런 문제는 빠른 수학적 이해력이 요구되어 재학생들의 사회·문화 문제 중에 가장 변별력이 높은 문제로 출제되는데 시간도 없는 공무원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내다니-.-. 그나마 출제자가 학생

들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면 ②번이 정답이어서 시간을 다소 줄여주려고 했던 측면은 엿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요구하는 계산문제의 정답은 ①, 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찍게 됩니다. 저는 해설을 쓰느라 이렇게 자세히 따져 본 건데 이런 계산이 빠르게 안된다고 생각되면 그냥 풀려고 하지 말고 ①, ②번 중에 찍어야 합니다. 대다수가 그런 거니까 못 풀었다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이고 운에 맡겨서 맞추면 좋은 문제입니다.

11. [정답] ①

[출제영역] 사회·문화 자료 분석 문제(계층구조)

① (O)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인구는 63명(=3+5+35+10+3+7)이고 대물림 인구는 37명(=2+25+10)으로 세대 간 계층 이동 인구가 대물림 인구보다 많습니다.

부모 \ 자녀	상층	중층	하층	합계
상층	2명	3명	5명	10명
중층	10명	25명	35명	70명
하층	3명	7명	10명	20명
합계	15명	35명	50명	100명

② (X) 부모와 같은 자녀의 수는 상층은 2명, 중층은 25명, 하층은 10명으로 중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부모 \ 자녀	상층	중층	하층	합계
상층	2명	3명	5명	10명
중층	10명	25명	35명	70명
하층	3명	7명	10명	20명
합계	15명	35명	50명	100명

③ (X) 세대 간 상승 이동은 43명(=3+5+35)이고 하강 이동은 20명(=10+3+7)으로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보다 많습니다.

부모 \ 자녀	상층	중층	하층	합계
상층	2명	3명(↑)	5명(↑)	10명
중층	10명(↓)	25명	35명(↑)	70명
하층	3명(↓)	7명(↓)	10명	20명
합계	15명	35명	50명	100명

④ (X) 부모계층 구성원의 숫자는 상층 15명, 중층 35명, 하층 50명입니다. 따라서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서 하층이 가장 높고 다음이 중층, 상층이 가장 낮으므로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입니다. 자녀 계층 구성원의 숫자는 상층이 10명, 중층이 70명, 하층이 20명입니다. 따라서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서 하층과 상층에 비해 중층이 가장 높은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계층에 비해 자녀계층의 계층구조가 안정적인 계층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 \ 자녀	상층	중층	하층	자녀의 계층 구조
상층	2명	3명	5명	10명
중층	10명	25명	35명	70명
하층	3명	7명	10명	20명
부모의 계층 구조 →	15명	35명	50명	

※ 앞선 10번 문제에 비해 정답을 찾기가 수월한 문제인데 같은 자료 분석문제의 경우에도 10번은 찍더라도 11번 문제는 풀어서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문제를 보자 마마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가려내는 연습이 필요한데 지속적인 연습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 [정답] ②

[출제영역]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예’라고 답한 A는 문화 상대주의이고 ‘자기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가?’에 대해 ‘예’라고 답한 B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며,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한 C는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ㄱ. (O)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약하여 선진 문물의 수용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용된 다른 문화의 장점을 활용해 자기문화의 낙후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개화기때 전기나 전차의 수용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ㄴ. (O) 자문화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들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열강들은 사회진화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화는 발전되고 세련된 것이라면 서구이외의 다른 문화들에 대해 미개하고 열등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다른 문화와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개화기때 크리스티교를 신봉하였던 서양인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제례의 풍습이나 무속신앙에 대해 미개와 야만으로 낙인을 찍은 경우입니다.

ㄷ. (O)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는 자신의 문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의 관점에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짐으로서 문화 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ㄹ. (X) 문화 상대주의는 자신의 문화는 열등하고 다른 문화는 우월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고 모든 문화는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한편 이런 문화 상대주의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될 경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이런 극단적 상대주의적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13. [정답] ③

[출제영역] 고용지표의 분석

취업자 수는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를 뺀 값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취업자 수를 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실업자 수	취업자 수
2009년	30,000명	20,000명	1,000명	19,000명
2014년	35,000명	21,000명	3,000명	18,000명

① (X)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 활동 인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업률을 계산하면 2009년은 5%(=1,000/20,000×100), 2014년은 ≒14.3%(=3,000/21,000×100)이므로 2009년에 비해 2014년의 실업률이 높습니다.

② (X) 2009년의 취업자 수는 19,000명이고 2014년은 18,000명으로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취업자가 더 적습니다.

③ (O)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률을 계산하면 2009년은 ≒63.3%(=19,000/30,000×100), 2014년은 ≒51.4%(=18,000/35,000×100)이므로 2009년보다 2014년에 고용률이 더 낮습니다.

④ (X) 2009년 대비 2014년의 실업자 증가율은 200%(3,000-1,000/1,000×100)이고 취업자 증가율은 ≒-5.3%(=18,000-19,000/19,000×100)이므로 실업자 증가율이 취 취업자 증가율에 비해 높습니다.

14. [정답] ④

[출제영역] 생산 가능 곡선의 분석

① (X) 생산 가능 곡선 상의 모든 생산 수량 조합은 한 나라의 생산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수량조합이므로 모두 효율적인 생산 조합입니다.

② (X) 생산 수량 조합이 A(1,100)→B(2,80)일 경우 X재 1단위를

더 생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Y재 20단위를 포기하였으므로 X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Y재 20단위입니다. 생산 수량 조합이 B(2,80)→C(3,60)일 경우 X재 1단위를 더 생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Y재 20단위를 포기하였으므로 X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역시 Y재 20단위입니다. 따라서 생산 수량 조합이 A(1,100)→B(2,80)일 경우와 B(2,80)→C(3,60)일 경우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동일합니다.

③ (X) 생산 수량 조합이 B(2,80)→A(1,100)일 경우 Y재 20단위를 더 생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X재 1단위를 포기하였으므로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재 1/20단위입니다

④ (O) 생산 수량 조합이 D(4,35)→C(3,60)일 경우 Y재 25단위를 더 생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X재 1단위를 포기하였으므로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재 1/25단위입니다. 생산 수량 조합이 C(3,60)→B(2,80)일 경우 Y재 20단위를 더 생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X재 1단위를 포기하였으므로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재 1/20단위입니다. 따라서 Y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C에서 B로 이동할 때가 D에서 C로 이동할 때보다 더 큼니다.

15. [정답] ④

[출제영역] 연관재와 시장 균형의 변동 추론

○ A재의 부품 가격 하락은 A재 시장의 공급 증가 요인입니다.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을 때 A재 공급이 증가하면 A재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A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으므로 즉 가격의 하락률에 비해 수요량의 증가율이 작아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감소하는 매출액이 수요량 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매출액에 비해 커서 A재의 판매수입(=매출액=소비지출액)은 감소합니다.

○ A재와 B재는 대체 관계이므로 A재의 공급 증가로 인해 A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B재 수요는 감소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으면 B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무관하게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여 B재의 판매수입(=매출액=소비지출액)은 감소합니다.

○ A재와 C재는 보완 관계이므로 A재의 공급 증가로 인해 A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C재 수요는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으면 C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무관하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여 C재의 판매수입(=매출액=소비지출액)은 증가합니다.

- ① (X) B재는 수요가 감소하여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 ② (X) C재는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은 상승합니다.
- ③ (O) A재와 B재의 가격은 모두 하락합니다.
- ④ (X) 해설참조

16. [정답] ②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

A, B, C, D 각 재화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	A	B	C	D
수요량 변화율(%)	-0.5	0	-1	1
가격 변화율(%)	1%	1%	1%	1%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절대값으로 표현)	0.5	0	1	수요 법칙의 예외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D재화의 경우 가격이 상승했는데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요법칙의 예외가 나타나는 재화입니다.

- ① (X) A재의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입니다.
- ② (X)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따라서 가격 상승에 대해서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판매량은 변화가 없습니다.(정량구매)

③ (O) C재는 수요는 가격에 대해 단위 탄력적입니다.

④ (X) D재는 가격이 상승했는데 수요량이 증가하므로 판매량이 증가합니다. 판매수입은 가격×판매량(=거래량)이므로 D재의 판매수입은 증가합니다.

17. [정답] ③

[출제영역] 명목 GDP와 실질 GDP를 통한 물가지수의 추론

제시된 자료에 물가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고 주어졌고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연도의 물가지수와 물가상승률을 구하면 표와 같습니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명목 GDP	400억 달러	400억 달러	400억 달러
실질 GDP	300억 달러	400억 달러	500억 달러
물가지수	≈133	100	80
물가상승률(%)	알 수 없음	-24.8	-20

① (X) 2011년의 물가지수는 133(=400/300×100)입니다.

② (X) 2012년의 물가지수는 100이고 2011년의 물가지수는 133이므로 2012년의 2011년에 비해 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주어진 자료에 기준연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준연도의 물가지수는 항상 100이므로 2012년의 물가지수는 기준연도의 물가지수와 일치합니다. 즉 2012년의 물가 수준은 기준연도의 물가 수준과 동일하고 2011년에 비해서는 하락했습니다.

③ (O) 2012년의 물가 지수는 100, 2013년의 물가 지수는 80이므로 2013년의 물가는 전년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④ (X) 물가상승률은 (금년도 물가지수-전년도 물가지수)를 전년도 물가지수로 나눈 값에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합니다. 이를 통해 2012년의 물가상승률은 ≈-24.8%(=100-133/133×100)이고 2013년은 -20%(=80-100/100×100)이므로 2012년과 2013년의 물가상승률은 다릅니다.

18. [정답] ②

[출제영역] 국제수지표

[핵심요약정리] 국제수지의 구성(최근 변화된 것을 반영함)

구분		구성 성분
경상 수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상품 수지	상품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와 상품의 수입으로 지출한 외화의 차액으로 경상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큼
	서비스 수지	여행, 교육(유학, 연수), 운수, 통신, 건설, 보험, 지적 재산권 사용료, 특허권, 저작권 등의 수출입
	본원 소득 수지	국내 외국인 근로자 또는 해외 내국인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차액, 대외 금융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이자, 투자 배당금 등으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
	이전 소득 수지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 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해외 유학생 및 교포에의 송금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이
자본·금융 계정	금융 계정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차관 도입이나 제공, 준비자산 등 민간 기업·금융 기관·정부의 자본 거래를 통해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
	자본 수지	자본 이전(자산 소유권의 무상이전, 채권자에 의한 채무면제 등), 비생산·비금융 자산(브랜드네임, 상표 등 마케팅자산과 기타 양도 가능한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의 대외 거래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

① (O) 김은 상품이므로 국내 김 생산 업체가 일본에 김을 수출하고 받은 금액은 상품 수지의 외화 수취 요인입니다.

② (X) 국제수지표를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 선택지가 서비스 수지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면 ‘국내 외국계 금융 회사(대표적으로 시티은행)가 들어오면 국내 고객들의 외국계 금융 회사에 대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늘어나고 이것은 금융 서비스의 제공이므로 국제수지표의 서비스

수지의 항목이다'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접근하도록 유도한 것이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입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외화의 지급요인이긴 하지만요. 바르게 해석하면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국 금융 시장에 진출하려면 외국의 자본을 가져와 우리나라에 금융회사(은행이나 증권회사)를 만들든가 기존의 회사를 인수하던가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직접투자(직접투자란 이윤을 얻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생산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에 해당하므로 경상수지 항목이 아니라 자본·금융계정 중 금융 계정에 해당합니다. 저도 선택지에서 금융계정의 직접 투자의 항목으로 제조업체의 공장 건설의 사례는 많이 봤지만 금융업체의 지점 설치 사례는 문제로 접해보지 못했는데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③ (O) 외국인의 국내 근로나 자국민의 해외 근로는 본원 소득 수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외국인이 국내 근로 이후에 본국의 가족에게 급여를 송금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원 소득 수지의 외화 지급 요인입니다. 본원 소득 수지 항목으로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금융 투자(주식이나 증권 투자 등)는 금융계정의 항목이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본원 소득 수지의 항목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④ (O) 이전 소득 수지는 대가없이(=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무상원조나 해외 유학생 및 교포에의 송금으로 국내 고등학생의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전 소득 수지의 지급 요인입니다.

19. [정답] ③
[출제영역]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관세 부과 전	관세 부과 후
자동차의 국내 시장 가격	P_0	P_1
자동차의 국내 수요량	Q_4	Q_3
자동차의 국내 공급자의 공급량	Q_1	Q_2
수입량	$Q_1 \sim Q_4$	$Q_2 \sim Q_3$
상품 수지 적자(=수입가격×수입량)	$P_0 \times (Q_1 \sim Q_4)$	$P_0 \times (Q_2 \sim Q_3)$
관세 수입(=관세 부과액×수입량)	없음	$(P_1 - P_0) \times (Q_2 \sim Q_3)$

복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표로 정리한 내용을 직접 그래프로 다시 그려보면서 정확한 의미를 되새겨 보세요!

① (O) 해설참조

② (O) 해설참조

③ (X) 정부의 관세 수입은 $P_1 \times (Q_3 \sim Q_2)$ 가 아니라 $(P_1 - P_0) \times (Q_3 \sim Q_3)$ 입니다. 즉 $P_1 \times (Q_3 \sim Q_2)$ 의 면적 중에서 $(P_1 - P_0) \times (Q_2 \sim Q_3)$ 은 정부의 관세 수입이고 $P_0 \times (Q_2 \sim Q_3)$ 은 관세 부과 이후의 상품 수지의 적자액을 의미합니다.

④ (O) 관세 부과로 인해 관세 부과만큼 자동차의 시장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국내 자동차 시장의 공급 곡선은 공급 법칙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공급 법칙에 따라 공급량은 Q_1 에서 Q_2 로 즉 $Q_2 - Q_1$ 만큼 증가합니다.

20. [정답] ④
[출제영역] 국제 무역의 이해(비교우위)

갑국의 경우 X재만 생산하면 5개를 생산할 수 있고 Y재만 생산하면 5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X재 5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5개이므로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개(=5/5)입니다. Y재 5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5개이므로 X재 1개(5/5)입니다.

을국의 경우 X재만 생산하면 4개를 생산할 수 있고 Y재만 생산하면 2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X재 4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개이므로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2개(=2/4)입니다. Y재 2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4개이므로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X재 2개(4/2)입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습니다.

구분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갑국	Y재 1개	X재 1개
을국	Y재 1/2개	X재 2개

갑국은 을국에 비해 X재와 Y재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에 비해 작으므로 을국은 X재에 비교 우위가 있고 Y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에 비해 작으므로 갑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① (X) 해설참조

② (X) 해설참조

③ (X) 해설참조

④ (O) ④번 선택지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앞에 보기 ①, ②, ③이 비교적 쉽게 틀린 선택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전에서는 ④번 선택지를 보지 말고 답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야합니다. 모든 선택지를 다 풀고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은 복기하는 과정에서나 필요합니다. 시험은 실전입니다. 실전은 실전답게 접근하려고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 선택지의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양국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일정한 교역 조건 속에서 무역이 발생하면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만을 생산하는 특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러면 교역 전에 비해 교역 후의 생산 가능 곡선에는 변화가 없지만 교역 전에 비해 교역 후의 소비가능선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특화 상품을 소비하는데 있어서 교역 전에 비해 포기해야하는 상품의 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양국의 특화 상품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무역 이전보다 커집니다. 예를 들면 갑국의 경우 Y재를 특화하여 5개를 생산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교역 조건[$1/2Y < 1X < 1Y$, $1X < 1Y < 2Y$]인 $1Y = 1.5X$ 로 교환하는 경우 교역 전에는 Y재 5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X재 5개이지만 교역 후에는 Y재 5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X재 7.5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선택지로나오지는 않았지만 서로 간의 교역에서 만족할 수 있는 교역 조건의 범위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정식으로 구하는 방법은 2개의 부등식을 세워 연립 부등식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변칙은 두 재화의 기회비용의 범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석대로 두 개의 연립 부등식을 세우면 갑국의 경우 특화 전 Y재 5개 생산을 포기하면 X재 5개를 생산할 수 있었으므로 이 조건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무역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5Y > 5X$ 입니다. 을국의 경우 특화 전 X재 4개 생산을 포기하면 Y재 2개를 생산할 수 있었으므로 이 조건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무역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4X > 2Y$ 입니다. 이렇게 도출된 두 부등식을 X와 Y가 1이 되게 계산하면 $1/2Y < 1X < 1Y$, $1X < 1Y < 2Y$ 같은 연립 부등식이 성립하며, 이는 곧 두 재화의 기회비용의 범위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